

어떤 노동개혁인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때 브라질은 한국의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 진영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나라 중 하나였다. 노동자당이 집권한 나라, 성장과 재분배 정책의 선순환을 구현하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공고화되던 1990년대, 브라질은 하이퍼 인플레이 사태 극복을 위한 화폐 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추진에 따른 몸살을 앓았고 1999년 금융위기 사태까지 맞았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의 증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대중들의 불만이 높았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인 ‘룰라’로 대표되는 브라질노동자당(PT)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2002년 집권에 성공한 뒤 한동안 브라질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다. 국내 산업생산 증가를 통한 성장 중심의 발전주의 경제정책과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저소득층 생계수당 지급 프로그램)’로 대표되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함께 폈다. 국내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고용 촉진과 실업 감소, 노동자 소득 증대와 부의 재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모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¹⁾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건 노동자당이 집권한, 또한 성장과 재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성공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남미의 브

1) 오삼교(2002), 「브라질 대선과 노동자당(PT)」,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년 10월 노동포럼.

라질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할당제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가 없어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던 노동자당과 브라질노총(CUT) 간의 관계를 통해 진보정당(민주노동당)과 대중조직(민주노총) 간의 관계 재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지역운동 및 공동체 운동과 결합되어 있는 브라질 노동운동을 보며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의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민주노총은 브라질을 비롯하여 남아공, 인도, 필리핀 등 경제·정치적 남반구에 해당되는 세계 14개국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남반구 노동조합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2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2차 세계사회포럼(WSF)에서 제시되었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은 한국에서도 오래 회자되었다.

하지만 브라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브라질 실험의 성공여부와 맞물려 조금씩 줄어들었다. 룰라 대통령 임기 8년 동안은 일정한 성과를 내는 듯하였으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의 수요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GDP 성장률은 감소하였고 실업 증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재분배정책과 성장정책 간의 충돌, 정치적 좌-우파 간의 갈등, 좌파세력 내에서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룰라 이후 집권한 노동자당의 지우마 대통령은 2016년 4월 탄핵되었다. 이후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된 것은 물론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법인세 축소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조치, 공공서비스 민영화 확대 등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에는 노동법도 개정되었는데, 노조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노동조건을 유연화하며 아웃소싱 가능 업무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0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사회자유당(PSL) 보우소나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친시장 정책(market-friendly policy)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고용 확대나 실업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노동권 약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이 고용 창출, 투자 촉진, 경제활성화 등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개혁 후 2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지표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다. 실업률은 12%대에서 낮아지지 않고 있고,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국 경제를 무역과 국제금융시장에 개방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했음에도 경제성장률, 투자율, 제조업의 성장률, 대외무역 참여율 등의 지표는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개혁 조치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도 조직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화물차 운전사들이 경유값 인상에 항의하며 10일 동안 파업을 하였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전자, 화학, 물류기업들의 정상적인 운영에 한동안 차질을 빚었다. 2019년 5월과 6월에는 재정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연금개혁,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와 파업이 일어났다. 노동조합 진영은 물론 학생, 사회단체, 정치단체 등이 결합하여 전국적인 대정부 반대 시위로 확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노동연구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어떤 노동개혁인가’를 화두로, 소득 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를 기치로 내건 한국 노동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브라질의 경험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호 기획특집 주제는 ‘노동개혁의 명과 암: 브라질의 경험’이다.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한국-브라질 학자들과의 세미나 내용을 좀 더 가다듬어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는 세 편의 글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되어 온 노동개혁과 2017년 단행된 노동법 개정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참여도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Vitor Araújo Filgueiras 교수와 Uallace Moreira Lima 교수는 노동권 약화와 노동유연화 확대, 소득 감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브라질의 노동개혁이 고용 확대, 수요 증진, 투자 촉진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2000년대 브라질의 경험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은 물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브라질의 역사와 노동개혁 내용이 조금 낯선 독자들에게는 기획특집 세 번째 글인 노호창 교수의 「2017년 브라질 노동법 개정 동향과 평가」를 먼저 읽기를 권한다.

ICLI